

인권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

文대통령, 윤석열에 “검찰 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지시 “법무부는 법·제도적 개혁, 검찰은 관행 등 개혁 추진해야” 조국, 대검 감찰부장·사무국장 인사 건의... 文대통령 수용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난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윤 총장에게도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

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5분 동안 조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의 방안에 대해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공식으로 지명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조 대변인은 전했다. /뉴시스



이주영 부의장 진행에 항의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영 부의장이 진행을 맡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정회건과 관련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국가들에 아픈 기억 자극”

국회, ‘도쿄올림픽 욱일기 응원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이자 전범기인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할 방침인데 이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30일 채택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 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안민석 문체위위원장이 제안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욱일기

와 나치문양은 같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제안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 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고, 이를 활용한 응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결의안에는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시 경기장 내에 욱일기 및 이를 활용한 물품의 반입행위, 이를 활용한 응원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제사회에 욱일기의 제국주의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국제 경기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도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국회는 욱일기를 활용한 응원에 대해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국가들에게는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행위인바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의 실현이라는 올림픽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도쿄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한 국제 화합 및 평화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IOC, IPC 등 국제체육기구 및 각국이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與,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당론 발의

화평법·화관법 예외사항... “잘 컨트롤해달라” 건의도

박주민, 검찰개혁 특위 보고... “중진의원 함께 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전원 만장일치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만장일치로 발의하기로 했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에 의원이 화평법(화학물질평가법)을 예외 사항으로 두는 것이기 때

문에 잘 컨트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그 외에 다른 우려는 없었다”고 전했다.

개정법에는 화평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부분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 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기로 결론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장은 당정청 회의 뒤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의중에서는 당내 검찰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의 특이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이 보고를 통해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실무 기구화 하기보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 함께하면 어떨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오늘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오늘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지난 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오늘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간 보장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하루 2~5시간씩 줄여 주 15~30시간이지만 오늘부터는 하루 1~5시간씩 단축해 주 15~35시간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뉴시스

문화상 의장 “검찰개혁, 法 제정이 핵심... 협치로 이뤄내야”

문화상 국회의장은 지난 30일 여야에 “검찰개혁은 법률의 제정이 핵심”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든 정

당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에게 “지금 우리 정치는 실종돼 있다. 지금처럼 놓아두면 정치권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 하반기는 최악이다. 누구를 지금 탓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네 책임이라고 주장하거

나 비난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국회답게 검찰을 검찰답게 할 일을 하면 된다”면서 “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았을 때 역사와 국민 앞에 담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광석화처럼 사안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이제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해 양보와 협조의 포용적 정치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박용진·시민단체,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촉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문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지도 벌써 11개

월이 넘었다”며 “교섭단체 대표들 간 빨리 합의해 최소한 11월이 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수 야당의 역할이 어떻게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반대하는 이유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

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발목이 잡혔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지난해 12월27일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자동 상정된다. /뉴시스

제3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합창 공연대회

2019. 10. 5(토) 오후 4:00
전라북도청 대공연장

- 주최 : 전주매일신문, JJC지방자치TV전북총국
- 주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